

계급·계층이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변인의 조절효과 연구

김희자*

◀ 요약 ▶

서구에서 복지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거론되는 계급·계층은 국내의 복지태도 연구에서는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왔다. 또한 계층·계급관련변인들이 한국사회에서 큰 설명인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연구들에서 그 이유로 교육의 영향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계급·계층의 지표로 활용되어온 소득, 고용상지위, 직종의 세 변인이 복지태도의 각 하위영역별로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교육이 과연 복지태도에 대한 계급·계층적 이해의 영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했다. 복지태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기존복지의 강화'와 '복지영역의 확장', 그리고 '보편주의 원리'의 세 하위 요인으로 분류했다.

분석결과 기존복지제도의 강화에 있어서는 계급·계층변인들이나 교육, 또 통제요인인 연령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했다. 복지영역의 확장에 대해서는 연령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으며 계급·계층변인들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어 계급·계층을 지지했으나 교육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보편주의 원리에 대해서는 연령은 부의 영향력을, 소득과 직종은 정의 영향력을 보여주었으나 교육을 통제하면 모두 통계적 유의도를 잃거나 설명력이 크게 떨어졌다. 이로써 계급·계층가

* 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somink@daejin.ac.kr)

설은 특정 복지태도에 대해서만 유의미하며 교육의 억제적 조절효과는 지지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복지태도, 중간층 복지이해, 계급이해

1. 서론

복지국가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통한 분배에서 야기되는 불평등을 조정하기 위해 국가가 강제적으로 재분배에 나서는 제도이다. 따라서 복지제도의 대중적 확장이 이루어진지 오래인 서구사회에서는 복지가 정치영역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 특히 경제적 부침에 따른 복지국가의 축소 혹은 확장을 둘러싼 논쟁은 매우 격렬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정치적 당파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어 왔다(Mishra, 1990; Dunleavy, 1980; Esping-Andersen & Korpi, 1984). 민주적 선거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정치적 논쟁은 복지국가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태도와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사회과학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되어 왔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 복지의식 혹은 복지태도와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었다. 이는 한국의 복지국가 발달의 역사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형식적이든 아니든 복지제도가 입법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였다. 이후 50여 년이 지나왔으나 그간 한국사회의 복지정책의 형성·구축 과정은 위로부터의 이식이라는 측면이 강했고 따라서 정치적 영역에서 복지정책이 거론되는 것은 정권에 의한 홍보성 수사가 중심이 되어, 복지정책논쟁에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한국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적극적 의견개진은 아마도 김대중정부 시절 국민연금의 개보험화와 건강보험의 통합을 둘러싼 도시직장인들의 저항이 거의 최초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복지정치의 역사를 돌아켜볼 때 지난 1-2년간 한국의 선거를 뜨겁게 달군 복지관련 쟁점과 그를 둘러싼 정치세력간의 대립, 그리고 2012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

서 주요 후보들이 보여주는 복지공약의 전면전은 매우 놀라운 반전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정치적 흐름은 향후 한국사회에서 대중들의 복지욕구와 태도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정치적 대응력에 있어서 중요성을 더해가리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에서 복지태도 혹은 복지의식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으나 연구의 대략적인 흐름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연구의 다수는 서구에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거론되어진 변인들에 대한 한국적 검증은 목표로 하고 있다. 서구에서 전통적으로 거론되어온 영향인은 계급·계층이라는 시장경제상의 위치에 따른 이해, 복지수급 경험의 여부 및 그와 관련된 성, 연령, 사회적 취약요인 등 복지이해, 복지부문 종사자로서의 위치 등 직업적 이해 등이다(김희자, 2012; 안상훈, 2009; Svallfors, 1995; Taylor-Gooby 1983, Saunders, 1990; Dunleavy, 1980). 이 중 계급·계층적 이해는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꼽혀 왔으며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 이 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검증은 거의 빠짐없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계급·계층 변수의 영향력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비일관적이다. 류만희·최영(2009), 이성균(2002), 주은선·백정미(2007) 등의 연구는 계급 혹은 계층에 따라 복지태도의 일부 영역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김영순·여유진(2011), 류진석(2004), 이아름(2010) 등의 연구는 계급 혹은 계층이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김영순·여유진(2011)의 연구는 이를 스웨덴, 미국 등의 서구에 비해 매우 다른 현상으로 대비시켜주고 있다.

이들 서로 다른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때 주목할 부분은 복지태도 혹은 복지의식으로 지칭된 종속변수들의 내용이 상당히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연구에 따라 편차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연구들은 복지태도라는 개념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또 어떤 경우는 그 같은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배경요인이 되는 사회경제적 가치관에 대한 태도 등을 복지태도로 지칭하기도 하고 두 부분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각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출의 확대, 복지책임의 주체, 복지를 위한 담세 의사, 보편주의에 대한 선호도, 소득불평등에 대한 태도, 경제효율성 등 다양한 변인이 복지태도라는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변인으로 설정되어왔으며, 그중 하나인 정부지출의 확대에 대한 태도도 어떤 프

로그래에 대한 태도를 살펴볼 것인지 연구마다 다양한 편차를 보인다. 이는 ‘복지’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외연에 기인하는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복지정책은 급여의 내용, 급여의 대상, 비용부담의 방식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가치관도 다양한 내용을 포섭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복지의 거대한 영역에 대한 태도를 하나의 연구에서 모두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따라서 선별은 불가피할 것이다. 아울러 이 거대한 영역 모두에서 특정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일관되게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것 또한 매우 비현실적인 일일 것이다. 따라서 복지태도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은 복지태도의 각 영역별로 분리되어 검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이 일부의 변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부분 논리적 도출 보다는 서구의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척도를 차용하면서 신뢰도 측정이나 요인분석 등의 검증작업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복지’가 대중적 정치쟁점이 된 경우가 최근의 극히 이례적인 사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복지인식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렵고 대중들의 의식의 분화와 성장 또한 아직은 미약하다는 점을 고려한 때문일 수 있으나, 아무래도 이러한 방식은 연구의 정밀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계급이나 계급관련변인들이 한국사회에서 큰 설명인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연구들에서 그 이유로 교육의 영향이 자주 거론된다는 것이다. 서구에서 복지태도가 계급에 따라 분화되는 이유는 복지라는 재분배제도 속에서 상위 계층은 시장경제 속에서 확보했던 몫을 내놓아야 하므로 복지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지고 하층의 경우는 반대의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인데, 상위 계층은 고학력자가 많고 이러한 고등교육이 상위 계층으로 하여금 당장의 계급적 이익에 매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위 계층의 복지태도가 계급적 이익에 조응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김영순·여유진, 2011).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주장이 검증과정을 거친 경우는 보기 힘들며 단지 계급요인의 영향력 미비라는 결과에 대한 사후적 추론의 형식으로 주로 언급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교육이 과연 복지태도에 대한 계급·계층적 이해의 영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복지태도에 있어 계급·

계층적 이해관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단지 교육의 효과 때문에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비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향후 복지정치에 있어서 계급적 동원이 우선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고학력층의 계급이해를 뛰어넘는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호소는 다소 보조적인 역할을 할 것이나 반대로 계급·계층적 이해관계가 복지태도에 그다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교육에 의한 효과가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계층을 망라하여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적극적 호소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제 막 복지정치의 대중적인 동원이 시작된 현 시점에서 계급·계층의 복지태도에 대한 영향력을 검토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복지태도는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배경요인이 되는 사회경제적 가치관보다는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로 한정하기로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복지태도의 영역은 워낙 광범위하여 어떤 변인도 그 모든 영역에서 일관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영역의 한정성이 필요하며, 사회경제적 가치관보다는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가 복지정치에 더 직접적으로 연관된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지정책 또한 그 자체가 매우 광범위한 프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별로 다양한 태도의 분화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구 복지국가의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정치적 차이를 야기했던 쟁점들을 드러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복지태도를 선별하여 이에 대한 계급·계층 및 교육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및 이론적 논의

1) 복지태도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 복지태도 혹은 복지의식, 복지인식 등으로 지칭된 변인들은 대체로 유사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개념을 칭하는 용어와 관계없이 동일한 속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는 복지태도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복지태도는 대체로 종속변인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복지태도의 하위 영역들을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선행연구들에서 복지태도를 측정하는 변인들을 유사성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변인으로 정부지출의 확대에 대한 태도를 볼 수 있으며, 이는 주로 복지프로그램별로 정부지출의 확대에 대한 찬성여부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 및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과 빈민을 위한 공공부조, 그리고 이 외에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취약집단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복지의 3대 프로그램과 가족지원, 주거지원, 대학교육 등 보다 보편적 프로그램으로 외연이 확장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망라되고 있다(김영순·여유진, 2011; 류만희·최영, 2009; 류진석, 2004; 이아름, 2010; 주은선·백정미, 2007).

복지태도를 파악하는 또 다른 변인으로는 복지책임의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부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또는 개인, 가족, 민간복지사업자와 같은 민간부문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태도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 역시 빈민, 실업, 노인, 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여성 등 다양한 대상집단에 대해 묻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김신영, 2010; 김은지·안상훈, 2010; 류진석, 2004; 이성균, 2002).

다음으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와 같은 복지정책의 원리에 대한 태도변인이 있다. 이는 보편성과 급여제공의 평등성을 직접적으로 묻기도 하고(류진석, 2004) 또 담세의사와 적용대상의 보편성을 한 데 묶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주은선·백정미, 2007). 세금은 국가복지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즉 누가 시장에서 취한 몫을 더 내놓을 것인가에 관련된 변인으로 국가복지확대에 대한 태도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변인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를 위한 증세,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태도, 빈자와 부자간의 세금배분원칙 등의 문항이 척도로 제시되고 있다(김영순·여유진, 2011; 류진석, 2004; 이아름, 2010; 이훈희·김윤태·이원지, 2011; 주은선·백정미, 2007).

이들 외에 특정 복지정책에 대해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배경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치관에 해당하는 변인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소득불평등에 대한 판단과 태도(현재 소득과 재산의 평등정도에 대한 평가,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책임성, 보건의료서비스의 평등원리에 대한 태도 등), 경제와 복지와의 관

계에 대한 태도(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 사회복지와 근로의욕과의 관계, 경제 효율성과 세금 등)등이다(김신영, 2010; 김영순·여유진, 2011; 류만희·최영, 2009; 류진석, 2004; 이아름, 2010; 이훈희·김운태·이원지, 2011; 주은선·백정미, 2007). 이들 변인들은 선행연구들에서 그 자체 복지태도의 한 하위영역으로서 종속변인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구체적인 복지정책들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영향요인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선행연구들은 이들 변인에 대해 복지태도에 대한 개념정의로부터 이론적으로 도출한 하위차원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고루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들 중 일부 차원만을 선별하여 복지태도를 측정한다. 이는 복지태도가 워낙 다차원적으로 구성되는 개념이며 또한 구체적인 복지프로그램도 대상별, 급여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동시에 연구에 포함시키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고 연구의 간명성이라는 측면에서 꼭 그런 방식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선별이 이루어질 때 선별의 논거는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으며 이 때문에 하위차원들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원칙 없이 척도문항이 선택되기도 하고 그러한 척도묶음을 통틀어서 복지태도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대표하는 척도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성과들을 읽어내는 데 혼란을 주기도 한다.

선행연구들에서 척도문항의 근거로 거론되는 것은 선행연구 혹은 국제적 사회조사 등에서 이미 많이 사용해왔던 문항이라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해왔던 문항들이 신뢰도가 높은 문항들일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나 이들 문항을 국내연구에 적용할 때 다시금 신뢰도를 확인하거나 요인 분석 등 척도의 단일차원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태도의 연구들에서 이러한 과정이 제시되지 않은 채 분석을 진행하는 연구들이 상당수 있어왔다. 이는 복지태도의 연구들이 대체로 연구를 위해 개별적으로 진행된 조사보다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되는 복지패널과 같이 패널조사의 일부분항을 차용해오면서 하나의 질문세트에 포함된 것을 한꺼번에 변인으로 채택하면서 자연스럽게 불거진 현상으로 보인다. 본 연구 역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들 연구와 현실적 한계를 공유하고는 있으나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의 하위차원을 특정함으로써 연구에 사용된 복지태도 개념의 외연을 확실히 하기로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복지태도는 크게 복지정책과 관련된 태도와 그러한 태도의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 가치관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 복지정치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영역은 국민연금, 혹은 노인복지정책 등 구체적인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도라고 볼 수 있다. 복지정책의 수립과 확대에서 쟁점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이다. 먼저 ‘누가’는 복지공급의 주체로서 국가가 인정되는 부분과 함께 비용 부담자와 관련된 사항이다.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처럼 민간보험과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험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수혜자가 곧 보험의 기여자이다. 반면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는 조세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므로 보다 직접적으로 계급·계층의 이해를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대중들의 복지태도는 사회보험이냐 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냐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다음으로 ‘누구에게’는 복지수혜의 대상을 확정하는 것이다. 서구 복지국가의 확대과정에서 복지정책의 대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논란거리 중의 하나는 ‘노동능력이 있는 대상’에 대한 복지수혜의 제공이었다. 이는 근대적 국가복지제도가 태동하던 초창기부터 차별화된 복지를 제공하는 기준으로 작동하였다. 어떤 사회이든 빈민에 대한 구호는 이전부터 존재해왔고 국가복지의 제도화도 이 부분이 시발점이었다. 이 때 빈민 중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은 별다른 저항이 없이 제도화되었으나 노동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성인 빈민들에 대한 복지수혜의 제공은 노동유인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경제논리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경기의 부침에 따른 국가복지의 축소논란에서 늘 공격의 대상이 되곤 했다. 서구사회가 대공황 등을 겪으면서 실업과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된 이후 오늘날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이들은 공공부조 혹은 실업 보험 등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포섭되어 있다. 하지만 노동유인의 강조와 생존권보장이라는 요구가 타협한 결과 이들은 직업훈련이나 구직활동 등 노동의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항시 증명해내도록 요구받고 있고 이는 현재 한국의 복지정책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원칙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대중도 이러한 기준에 따른 대상별로 복지정책지지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복지태도의 하위 차원들을 나름의 논거를 들어 선별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이러한 서구복지국가발달의 논란들이 한국사회에서도 정치적 쟁점화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류만희·최영(2009)의 연구는 복지대상별 정부지출의 확대에 대한 태

도를 요인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빈곤층 생활지원,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을 하나의 요인으로, 그리고 주거지원, 노인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을 두 번째 요인으로, 건강보험 및 보건을 세 번째 요인으로 묶었다. 첫 번째 요인과 두 번째 요인은 노동능력이 있는 대상에 대한 생활지원과 그렇지 않은 대상에 대한 생활지원의 구분에 상응하는 차이를 보이며, 첫째와 셋째는 생활보장과 의료보장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성균(2002)의 연구도 대상자별 책임주체에 대한 태도를 요인분석한 결과 빈곤층과 실업자가 한 요인으로, 노인·장애인·여성·소년소녀가장이 다른 한 요인으로 구분되어 대상집단의 노동능력 유무가 복지태도의 차이를 가르는 기준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아름(2010)은 요인분석 등의 통계적 검증이나 뚜렷한 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한 요인으로, 그리고 노인·장애인·빈곤층·실업·가족지원을 한 요인으로 구분하여 사회보험과 그 외의 프로그램들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사회보험인지 아닌지 노동능력을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닌지가 한국인의 복지태도의 분화를 설명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복지정책의 대상과 관련한 또 다른 쟁점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둘러싼 것이다. 국가복지의 시발점은 빈민 등에 대한 선별적 정책들이었지만 제2차세계대전 후 복지국가의 출현과 함께 보편적 프로그램이 발달되어 왔다.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대표적인 보편적 프로그램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혜자가 곧 기여자라는 보험원리를 적용하므로 논란이 크지 않지만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들에서 보편적 확장은 여전히 쟁점화될 수 있는 사안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교육이나 아동보육, 노령연금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에서도 일정소득이하의 취약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해당집단 전체에 제공할 것인가는 복지정치에서 중요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적 약자로 뚜렷이 규정될 수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아동은 본인은 사회적 약자이지만 그 부모 혹은 보호자는 취약자로 자동규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여부는 광범위한 사회적 논쟁을 야기하기 쉽다(김희자, 2003; 이병렬, 1999; Gordon, 1988). 한국에서도 최근의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쟁점화된 것과 같은 무상급식 혹은 아동보육, 반값 등록금 등의 경우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는 복지정치에서 폭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쟁점이다. 서구의 복지정치에 있어서 중간계급을 포괄하는 보편주의적 복지 프로그램들의 실시는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

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왔다. 보편주의 프로그램들은 중간계급들도 수혜자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도를 높여라 하는 것이다(Esping-Andersen & Korpi, 1984; Le Grand & Winter, 1987; Mishra, 1990).

반값등록금이나 최근의 무상보육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보편주의 외에도 급여의 내용과 관련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재원의 조달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급여의 내용은 둘 다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발달의 초창기에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 급여의 중심을 이루어왔지만, 이후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 외에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장기적 대응, 확대, 이동편이성 등 복지 욕구별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급여들이 확대되어왔다. 하지만 이들 사회복지서비스들은 서비스의 종류와 질에 대한 표준화나 규격화가 전통적인 급여의 내용이었던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보다 어렵다. 또한 확대, 이동편이성, 노인성 질환등과 같이 본인이나 가족의 당장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이미 사회적 합의를 마친 것들을 외에, 주거나 대학교육 등으로 급여를 확대할 때에는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많다.

본 연구는 이를 감안하여 포괄대상의 범위와 자원조달 방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의 세 가지 종류의 복지프로그램 및 노동능력의 유무를 반영하는 복지정책의 지지도와 사회복지서비스 중에 사회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급여를 담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보편적 급여인지 선별적 급여인지에 대한 복지구성의 일반적 원리에 대한 태도의 세 가지 범주로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2) 복지태도와 계급·계층

복지태도에 대한 전통적인 계급·계층 가설은 시장경제에서 많은 몫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급은 그러한 분배를 재조정하는 복지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계층은 복지제도를 통해 조세나 기여금의 형태로 복지비용을 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할 것이고 공적 복지가 아닌 사적 복지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지제도를 통한 수혜가 절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구사회에서 직업적 위세가 낮은 집단, 저소득집단, 주관적 사회계층이 낮은 집단들일수록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경험적으로 입증되고 있다(Taylor-Gooby, 1982; Papadakis, 1993; Svallfors, 1995).

그러나 서구에서 복지국가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전통적인 계급·계층 외의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이 점차 커짐을 주장하는 논의들이 제기되어 왔는데, 그러한 변수들로는 성이나 연령, 복지부문에 종사하는지의 여부, 복지급여의 혜택이 사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변수들이 제시되었다(김희자, 2012). 성별은 특히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들이 발달하면서 복지이해와 연관성을 높여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동의 양육과 간병 등 ‘사적인 무급’ 돌봄노동의 주요 수행자였던 여성들은 보육서비스와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발달을 통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뿐 아니라 확대되는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에서 ‘공적인 유급’의 돌봄노동자로 고용됨으로써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는 점들이 강조되고 있다(Svallfors, 1995). 연령 또한 아동기, 어린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부모의 시기, 노년기에는 수혜자로서, 또한 장년기에는 복지비용의 주부담자로서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복지이해를 경험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실제로 복지분배가 계층간 재분배보다는 같은 계층끼리의 재분배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Gough, 1990).

하지만 경제적 재분배라는 복지제도의 속성상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력 역시 경제적 이해와의 친화력 속에서 설명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보육서비스, 간병 등도 비록 급여의 형태가 돌봄노동이라는 현물급여이지만 모든 현물급여도 결국은 현금비용으로 계산되며, 성이나 연령 등에 따른 수요층 역시 이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상층의 이해와 그렇지 않은 하층의 이해는 같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의 복지이해 역시 경제적 지위에 따른 이해와 완전히 구분되기는 힘들다. 스벨포스는 스웨덴의 복지태도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이들 탈계급론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계급이 여전히 복지태도에서 중요한 영향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바 있다(Svallfors, 1995).

복지태도 중 복지정책의 보편주의와 관련된 태도는 이러한 전통적 가설과 다른 계급 계층의 복지태도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보편적 프로그램들은 중간계급도 수혜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중간계급도 만족할만한 양질의 국가복지가 보편주의적으로 제공된다면 중간계급은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구 사회에서 중간층을 포함하는 보편주의적 프로그램은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기 쉽기 때문에 제도수립이 용이할 뿐 아니라 복지국가가 정치적으로 공격당하는 국면에서도 쉽게 축소되지 않았다(Gould, 1982; Le Grand & Winter, 1987; Gilbert, 1983; Mishra, 1990). 따라서 복지태도 중 보편적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또는 보편주의 원리에 대한 태도는 경제적으로 극단의 최상위 계층을 제외한다면 대체로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태도에 미치는 계급 혹은 계층의 영향력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일관적이지 않다. 대체로 계급이나 계층을 측정하기 위한 변인으로는 범주적 변인인 직종이나 고용상의 지위, 그리고 연속적 변인인 소득이 채택되고 있다. 먼저 직종이 복지프로그램별 정부지출의 확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향을 검토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영순·여유진(2011)의 연구는 어떤 계급집단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이아름(2010)의 연구 역시 대상집단별 정부지출의 확대에 대한 지지도에서 모든 대상집단을 망라한 전체적인 태도에서나 하위영역별 태도에서나 계급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영순·여유진(2008)의 연구는 블루칼라들은 복지국가에 보다 높은 지지적 태도를 보이거나 전문직, 준전문직, 화이트칼라 등 중간층은 낮은 복지국가 지지도를 보여주는 스웨덴, 영국, 독일, 미국 등의 연구자료와 비교하면서 복지태도에 대한 계급의 설명력이 높은 서구와 한국의 상황이 매우 다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상의 지위와 소득을 모두 검토한 류만희·최영(2009)의 연구에서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집단이 복지정책의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전체적 지지도와 그 하위범주에서 국민연금, 빈곤층 생활지원,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등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지지도, 그리고 건강보험 및 보건 등의 의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출확대에 대한 지지도에 있어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지지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실업자군이 소득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출과 주거, 노인, 장애인, 아이양육가족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출에 대해 높은 지지도를 보여 계

급이 정부의 복지지출확대에 대한 태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복지책임의 주체로서 공공부문을 강조하는지에 대한 태도에 고용상의 지위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성균(2002)의 연구에서는 고용주집단이 모든 대상집단에 대해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끄는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실업자 집단은 봉급생활자, 특히 노동계급보다 국가복지지지도가 높았다.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은 복지정책의 대상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중간계급은 빈곤층과 실업자를 위한 복지에서 노동계급보다 더 공공부문의 책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인대상 복지에서는 노동계급이 더 높은 공공부문의 복지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신영(2010)의 연구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에서 복지책임의 주체로서 공부문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두 연구 모두에서 계급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으나 영향력의 방향과 내용은 동일한 종속변수에 있어서도 일관적이지는 않다.

다음 소득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류만희·최영(2009)의 연구는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에서 전체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의 확대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상집단별로 구분한 하위영역들에 대한 정부지출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소득이 별다른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일관된 결론을 얻지 못했다. 류진석(2004)의 연구는 이에 대해 소득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주은선·백정미(2007)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의 확대에 대해 지지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태도가 계급·계층적 이해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다.

김신영(2010)의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복지책임의 주체로서 공부문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지출의 확대에 대한 지지도와 복지책임의 주체에 대한 태도, 보편적 복지 여부 등에 대한 태도를 모두 망라하여 분석한 류진석(2004)의 연구는 복지책임의 주체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소득의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보편적 복지여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보편적 복지와 관련하여 살펴본 주은선·백정미(2007)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의 확대에 대해 지지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담세의사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담세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빈자들만을 위한 복지에 대한 담세의사에서는 소득이 별다른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 외에 이훈희·김윤태·이원지(2011)의 연구는 소득이 낮을수록 평등지향적 친복지적 성향이 강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고부담고복지사회와 저부담저복지사회에 대한 태도를 파악해본 안상훈(2009)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복지태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3)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와 교육

복지프로그램별로 정부지출의 확대에 대한 지지도를 알아본 연구들에서 김영순·여유진(2011)의 연구와 이아름(2010)의 연구는 교육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고 류만희·최영(2009)의 연구는 학력이 높을수록 전체적인 복지정책의 정부지출 확대에 대해 지지도가 높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소득보장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학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의료보장과 노인 등의 취약집단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출의 확대에 대해서는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집단이 높은 지지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진석(2004)의 연구는 대졸 이상의 집단에서 정부지출의 확대에 대해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하지만 주은선·백정미(2007)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정부의 복지지출확대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층하의 계층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교육수준은 상층에서만 의미 있는 영향을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교육은 소득상위계층에서만 학력이 높을수록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의 복지지출확대에 지지적이라는 이 연구의 결과와 함께 교육이 상위계층에서 계급이해적 복지태도에 대한 억제효과를 가짐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복지책임의 주체로서 공공부문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파악해보면 김신영(2010)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은 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진석(2004)의 연구에서는 대졸이상의 고학력집단에서 국가책임지향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재정확충에 대해서도 대졸집단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균(2002)의 연구는 빈민과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에서는 대졸집단의 선호도가 뚜렷하나 장애인, 여성, 노인 등의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에서는

학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주의 여부와 관련하여 류진석(2004)의 연구에서는 교육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은선·백정미(2007)의 연구에서는 보편적 복지와 빈민들을 위한 복지 모두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답세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친복지적 성향을 보여주었다. 한편 안상훈(2009)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부담고복지사회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 교육이 친복지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기초하여 본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보험여부, 노동력유무, 급여의 내용이라는 기준이 한국에서도 복지프로그램별로 태도의 차이를 야기하는 기준이 되는지 검증한다.

둘째 상위계층은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도가 낮고 하위계층은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도가 높을 것이라는 계급·계층 가설이 한국에서도 유효한지 검증한다.

셋째 교육은 이러한 계급·계층 이해에 따른 복지태도의 차이에 대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한다.

넷째 소득과 직종, 고용상의 지위 중 어떤 변인이 계급·계층과 관련한 위의 가설들을 입증하기에 가장 타당한 변인인지 확인한다.

3. 연구의 방법과 주요 변수

1) 연구에 활용된 자료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중 복지인식에 대한 부가조사가 진행된 2010년 조사를 통해 수집된 것이다. 수집된 자료는 총 2,366명으로 이 중 미응답 234명을 제외한 2,132명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복지패널은 원래 저소득가구가 과대표되어 표집되었고 이에 따라 분석에 사용된 자료에서도 경상소

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 미만인 저소득가구의 비중이 781명, 36.6%로 높게 나타난다. 연령은 40대 이하 13.5%, 40대 21.1%, 50대 19.6%, 60대 17.8%, 70대 20.8%, 70대 이상 7.3%로 젊은 연령층이 적게 표집되었고, 이와 함께 성별도 고령자층의 성별구조가 많이 반영되어 남성이 971명(45.5%), 여성이 1,161명(54.5%)으로 여성이 높은 비율이다.

2) 변인의 측정과 분석

본 연구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는 사회보험여부 및 노동능력의 유무를 반영하는 각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태도와 사회복지서비스 중에 사회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급여를 담고 있는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보편적 급여인지 선별적 급여인지에 대한 복지구성의 일반적 원리에 대한 태도의 세 가지 범주를 포함하고 있는데 먼저 앞의 두 영역을 알아보기 위해서 복지프로그램별 정부지출의 확대에 대한 지지도를 알아보는 문항을 택했다. 프로그램별 태도에 대한 문항은 정부지출의 확대에 대한 지지도와 복지제공의 주체에 대한 생각을 질문하는 문항들이 있는데, 후자보다는 전자가 국가복지에 대한 지지도를 보다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보건’, 그리고 노동능력이 있는 대상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으로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빈민층생활지원’, 노동능력이 없는 대상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으로 ‘노인생활지원’와 ‘장애인생활지원’, 새로운 급여의 내용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족 지원’, ‘교육’, ‘주거지원’ 등에 대한 정부지출의 확대 지지도를 묻는 9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복지정책구성에 있어서 보편주의의 원리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복지는 전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의료, 연금 등의 육아나 양로와 같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과 가난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 중 어느 방안으로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네 문항이 선택되었다.

이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복지정책별 국가지출확대에 대한 태도는 고유값¹ 이상의 요인이 두 개 추출되었다. 요인점수에 따라 문항을 분류하면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 빈민층생활지원, 노인생활지원, 장애인생활지원이 한 요인으로,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가족 지원, 교육, 주거지원이 다른 한 요인으로 묶여 복지태도의 척도화를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들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각 요인별 문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공공부조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빈민층을 위한 생활지원이 모두 한 요인으로 묶여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즉 사회보험이나 현재 문제를 안고 있는 집단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차원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 취약자들을 위한 생활지원과는 다른 요인들로 분류되었던 ‘빈민층을 위한 생활지원’도 같이 묶여, 노동능력의 유무 자체도 복지태도를 가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들에서 빈민층에 대한 태도와 동일 요인으로 분류되었던 ‘실업’은 여기서는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이 실업자들에 대한 생활지원이 아닌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에 대한 정부지출의 확대에 대한 태도를 묻는 것이어서 현재 발생한 실업문제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듯하다. 이 외에 두 번째 요인으로 묶인 문항들로는 가족지원, 교육, 주거지원으로 이는 이제까지 한국의 복지정책에서 당연시되던 프로그램들이 아닌 새로운 영역의 복지지원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첫 번째 요인과 두 번째 요인을 야기한 차이는 이미 한국에서 제도화된 지 길게는 20여 년, 짧게는 십수 년이 경과하여 당연시되는 복지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이지만 거의 전 가구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용대상이 적고, 대중들의 인식 속에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교육, 주거지원, 아동양육 등과 유사한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5차 복지패널 조사가 실시된 2010년은 이러한 교육, 보육 등에 대한 국가지원에 대해 아직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해볼 때 두 요인의 속성을 이렇게 분류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종속변인

복지정책별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지지도	
기존복지의 강화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건강보험 및 보건의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빈민층생활지원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노인생활지원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장애인생활지원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복지영역의 확장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아이를 키우는 가족 지원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주거지원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보편주의에 대한 태도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과 가난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	

[표 2] 교육 및 계급의 집단별 분포

변 인		빈 도	비 율
교육	무학	220	10.3
	초등학교	507	23.8
	중학교	295	13.8
	고등학교	644	30.2
	전문대학	153	7.2
	대학교 이상	313	14.7
계 급	상용	362	17.0
	임시/일용	389	18.2
	고용주	42	2.0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495	23.2
	비경제활동인구	844	39.6
집 단	관리전문직	141	6.6
	사무판매직	350	16.4
	농림어업	300	14.1
	기능조립직	234	11.0
	단순노무직	259	12.2

* 직종의 집단별 비율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것이다. 비경제활동은 종사상지위에 따른 구분과 동일하여 중복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요인을 ‘기존복지의 강화’로 후자의 요인을 ‘복지 영역의 확장’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기존복지의 강화에 해당하는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α =.672였으며 복지영역의 확대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신뢰도는 Cronbach- α =.558이었다. 다음 보편주의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네 가지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역시 고유값 1 이상의 요인이 두 개 추출되었으며,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과 가난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태도’의 두 문항이 한 요인으로, 그리고 ‘대학교육까지 모두 무상’과 ‘보육시설 무상 제공’이 다른 한 요인으로 묶였다. 각각에 대한 신뢰도 분석의 결과 전자는 Cronbach- α =.579, 후자는 Cronbach- α =.324로 마지막 요인은 분석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선택된 모든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각 하위요인별 점수는 선택된 문항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요인별 지지도가 높다.¹⁾

독립변인 중 계급·계층에 대한 변인으로는 선행연구들에서 쓰였던 세 가지 즉 소득, 종사상의 지위, 직종을 채택했다. 소득변인은 경상소득을 지표로 택했는데 그 이유는 복지란 시장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므로 경상소득은 소득이전이 완료된 이후의 소득인 가처분소득보다 복지에 대한 경제적 이해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종사상의 지위는 경제활동참여상태를 알아보는 문항에서 모두 9가지의 응답범주가 있었으나 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다섯 개 범주로 축소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²⁾ 직종은 한국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체계를 활용하였다. 대분류체계는 모두 9가지의 범주를 가지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축소하여 관리전문직(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판매직(사

1) 추출된 세 가지 복지태도의 하위요인은 김희자(2013)에서 사용된 ‘기존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복지영역의 확장’, ‘보편주의’의 요인들과 같다.

2) 임시/일용직에는 임시직과 일용직 외에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범주를 포함시켰다. 이는 복지정책을 통해 제공받은 일자리라는 특성만 다를 뿐 임시직이나 일용직과 동일한 고용상 지위 속성을 갖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체의 0.9%를 차지한다. 이 외에 자영업에는 무급가족종사자 범주를 포함시켰다.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라는 패널조사상의 정의로 미루어 이들이 세대주였다면 자영업으로 분류되었을 것이나 세대주가 아니어서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된 것으로, 계급적 이해에 있어서 자영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이들은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이 외에 실업자군은 복지태도에서 중요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복지패널조사에서는 그 수가 18명에 불과해 독자적인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시켰다.

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조립직(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의 다섯 개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이 외 비경제활동참여자들을 한 범주로 분류하여 모두 6개 집단을 분석에 활용하였다¹⁾.

[표 3] 집단별 복지태도

변 인		기존복지의 강화	복지영역의 확장	보편주의
교육	무학	18.55	14.15	5.81
	초등학교	18.81	14.29	5.74
	중학교	18.27	14.35	6.05
	고등학교	18.64	14.67	6.46
	전문대학	18.52	15.07	6.90
	대학교 이상	18.80	14.97	7.09
계급 집단	직종			
	관리전문직	18.93	15.08	7.14
	사무판매직	18.48	14.63	6.58
	농림어업	18.38	14.07	5.95
	기능조립직	18.82	14.56	6.37
고용상 지위	단순노무직	18.42	14.71	6.03
	상용	18.70	14.83	6.81
	임시/일용	18.63	14.81	6.20
	고용주	18.22	14.24	6.45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8.40	14.19	6.10
	비경제활동인구	18.77	14.55	6.20

교육은 무학에서 박사에 이르기까지 8개 범주로 측정되었으나 대학원 이상은 해당자가 매우 적어서 대학 이상을 동일범주로 묶어 모두 6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각 계급집단과 학력집단의 분포는 [표 2]과 같으며, 각 집단의 복지태도 점수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1) 9가지 대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군인은 전체 2,132명 중 3명으로 이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4. 분석결과

계급·계층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육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복지태도의 각 하위차원별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연령을 먼저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구에서 성과 연령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은 복지이해와 관련하여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성은 복지태도의 모든 하위영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국내의 다른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여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배제하였다. 반면 연령은 한국인의 여러 정치사회적 태도들에서 중요한 차이를 드러낼 뿐 아니라 본 연구의 조절변인인 교육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변인이므로 이의 변량을 먼저 파악함으로써 각 독립변인들 및 조절변인의 영향력을 독립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각 독립변인별로 두 가지로 실시되었는데, 먼저 첫 번째 분석은 연령을 먼저 투입하고 각 독립변인을 두 번째로 투입하여 연령의 변량을 제외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다음에는 연령을 먼저 투입한 후에 교육변인을 두 번째로 투입하고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을 투입하는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¹⁾ 첫 번째 위계적 회귀분석과 두 번째 위계적 회귀분석 모두에서 각 계급·계층변인들이 종속변인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계급·계층 가설이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교육변인의 조절효과 여부는 무의미할 것이다. 반면 첫 번째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으나 두 번째 위계분석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계급·계층 가설과 교육변인의 조절효과가 모두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첫 번째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계급·계층변인의 영향력이 유의미하

1) 독립변인 외의 제3의 변인이 종속변인에 대해 독립변인과 반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을 억제하는 경우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즉 단순회귀분석에서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측할 수 없었던 변인이 다른 제3의 변인과 함께 다중회귀분석을 하였을 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면 이 제3의 변인은 억제적 변인으로 볼 수 있다(양병화, 2007).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 중 제3요인의 변량을 우선적으로 완전 통제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최대한 조절변인의 영향을 배제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해보기로 하였다.

나 두 번째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무의미하다면 교육변인은 억제적 조절효과가 아니라 독립변인과 동일한 방향으로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계급·계층보다 더 중요한 변인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 기존복지의 강화를 위한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태도와 계급·계층변인들

[표 4]는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 중 첫 번째 요인인 기존복지의 강화를 위한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태도에 대해 각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첫 번째 위계분석의 결과 1모형에서 연령은 기존복지의 강화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을 통제한 제2모형에서 소득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으나 설명력은 0.5%에 불과하였으며 기존복지의 강화에 부의 영향을 미쳐, 소득이 높을수록 기존복지제도에 부정적이었다. 다음 교육을 포함한 두 번째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교육을 투입한 2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으며 1모형에 이어 2모형의 설명력도 0%에 불과하였다. 2모형이 설명력이 거의 없으므로 3모형에서의 소득의 영향력은 첫 번째 위계분석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아, 설명력은 0.6%였다. 이러한 결과는 직종에 대한 두 번의 위계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종의 추가설명력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위계분석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명력은 0.7%에 불과하였으며, 두 번째 위계분석의 3모형은 모형자체의 통계적 유의도가 확보되지 않았다. 직종의 영향력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두 분석 모두에서 관리전문직과 기능조립직, 비경제활동인구는 단순노무직에 비해 기존복지제도의 강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계급·계층가설에 배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고용상지위는 두 분석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정리하면, 소득과 직종은 기존복지제도의 강화를 위한 정부지출확대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 직종은 계급·계층가설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두 변인 모두 설명력은 매우 미약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한 교육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여 조절효과가설은 지지되지 않았으며 연령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실시된 지 일정정도

시간이 흘러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복지제도의 강화에 대해서는 계급·계층이나 연령, 교육 등의 변인에 따른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4] 기존복지의 강화를 위한 정부지출확대에 대한 태도와 교육 및 소득·고용상의 지위·직종

기존복지의 강화를 위한 정부지출확대에 대한 태도와 계층계급변인과의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소득		직종		고용상 지위	
		모형II		모형II		모형II	
연령	-.004 ^a	연령	-.034	연령	.001	연령	-.006
				관리전문	.057 [*]	상용	.010
				사무판매	.013	고용주	-.025
				농림어업	-.003	자영	-.038
				기능조립	.058 [*]	비경제	.031
				비경제	.077 [*]		
상수=18.674 ^{***} R ² =.000 F=.036(n.s.)		상수=19.139 R ² =0.5%, F=4.647 [*] R ² 변화량=.005 ^{**}		상수=18.387 ^{***} R ² =0.7% F=2.267 [*] R ² 변화량=.007 [*]		상수=18.674 ^{***} R ² =0.4% F=1.682(n.s.) R ² 변화량=.004(n.s.)	
모형I		모형II		모형III		모형III	
		연령	.007	연령	-.008	연령	.001
		교육	.018	교육	.048	교육	-.001
				소득	-.086 ^{**}	직종 ^b	
						관리전문	.057 [*]
						사무판매	.013
						농림어업	-.003
						기능조립	.058 [*]
						비경제	.077 [*]
						고용상 지위 ^c	
						상용	.008
						고용주	-.026
						자영	-.037
						비경제	.030
상수=18.452 ^{***} R ² =.00% F=.218(n.s.) R ² 변화량=.000(n.s.)		상수=18.623 ^{***} R ² =.6% F=3.972 ^{**} R ² 변화량=.006 ^{***}		상수=18.393 ^{***} R ² =.7% F=1.942(n.s.) R ² 변화량=.006 [*]		상수=18.524 ^{***} R ² =.4% F=1.414(n.s.) R ² 변화량=.004(n.s.)	

* p<0.05, ** p<0.01, *** p<0.001

a 모든 요인별 계수는 표준화계수

b 준거집단은 단순노무직

c 준거집단은 임시/일용직

2) 복지영역의 확장을 위한 정부지출확대에 대한 태도와 계급·계층

복지영역의 확장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태도와 계급·계층 변인들과의 첫 번째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연령은 3.8%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복지영역의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계층변인을 투입한 2모형에서 소득은 0.8%의 추가 설명력을 보였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복지영역의 확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 역시 0.8%의 추가 설명력을 보였으며 사무판매직과 농림어업종사자, 기능조립직에서 단순노무직보다 복지영역의 확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고용상의 지위도 0.9%의 추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와 자영업 집단이 임시/일용직에 비해 복지영역의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¹⁾ 즉 첫 번째 위계분석의 결과 계급·계층을 나타내는 세 가지 변인 모두에서 종속변인에 대해 계급·계층이 상위일수록 복지영역의 확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일관된 결과를 얻었다. 물론 연령변인을 통제한 추가설명력이 0.8~0.9%로 미약하기는 하지만 연령과의 공변량이 모두 제외된 위계적 모형의 결과이며, 기존복지제도의 강화에서와 달리 연령이 상당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복지영역의 두 번째 위계분석에서 2단계에 교육변인을 투입한 결과 교육의 추가설명력은 0.1%에 불과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량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계급·계층 변인들의 설명력은 첫 번째 위계분석에서의 결과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중 소득의 영향력은 교육변인을 통제한 후 3단계에서의 추가설명력이 1.1%로, 첫 번째 위계분석에서보다 더욱 높아져, 교육변인의 영향력이 미미하기는 하지만 소득에 대해 역의 방향으로 억제적 효과를 미침을 짐작할 수 있었다.

1) 복지영역의 확장에 대한 지지도에 있어서 고용상지위와 직종 중 자영업과 농림어업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두 집단은 모두 복지영역의 확장에 대한 지지도에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동일한 집단의 영향력으로 볼 수 있다. 즉 복지패널에서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유급종업원 없이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들과 함께 일을 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자'이며 본 연구에서 자영업의 범주로 포함시켜 분석한 무급가족종사자는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이다. 따라서 농림어업종사자 중 고용된 농업노동자가 아니면 대부분 이 범주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용상지위의 자영업 더미 변수와 직종의 농림어업 더미 변수를 교차분석한 결과 300명 중 10명을 제외한 농림어업종사자들이 고용상지위에서 자영업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볼 때 복지영역의 확장에 대한 지지도에는 계급 중 농림어업종사자들의 보수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 복지영역의 확장을 위한 정부지출확대에 대한 태도와 교육 및 소득·고용상의 지위·직종

복지영역의 확장을 위한 정부지출확대에 대한 태도와 계층계급변인과의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소득 모형II		직종 모형II		고용상 지위 모형II			
연령	-.194 ^{***a}	연령	-.232 ^{***}	연령	-.206 ^{***}	연령	-.202 ^{***}		
		소득	-.097 ^{***}	직종		고용상지위 ^c			
				관리전문	.003	상용	-.042 [*]		
				사무판매	-.064 [*]	고용주	-.049 [*]		
				농림어업	-.064 [*]	자영	-.086 ^{**}		
				기능조립	-.059 [*]	비경제	-.002		
				비경제	-.002				
상수=16.036 ^{***} R ² =.038 F=78.939 ^{***}		상수=16.552 ^{***} R ² =.046 F=48.139 ^{***} R ² 변화량=.008 ^{***}		상수=16.280 ^{***} R ² =.045 F=15.957 ^{***} R ² 변화량=.008 ^{**}		상수=16.242 ^{***} R ² =.046 F=19.485 ^{***} R ² 변화량=.009 ^{**}			
모형		모형II		모형III		모형III			
		연령	-.169 ^{***}	연령	-.190 ^{***}	연령	-.188 ^{***}		
		교육	.040	교육	.081 ^{**}	교육	.036		
				소득	-.117 ^{***}	직종 ^b			
						관리전문	-.007		
						사무판매	-.071 [*]		
						농림어업	-.063 [*]		
						기능조립	-.061 [*]		
						비경제	-.006		
						고용상지위 ^c			
						상용	-.049 [*]		
						고용주	-.052 [*]		
						자영	-.084 ^{**}		
						비경제	-.004		
상수=15.619 ^{***} R ² =3.9% F=40.512 ^{***} R ² 변화량=.001 (n.s.)		상수=15.818 ^{***} R ² =.049 F=34.769 ^{***} R ² 변화량=.011 ^{***}		상수=15.953 ^{***} R ² =.049 F=13.888 ^{***} R ² 변화량=.007 ^{**}		상수=15.830 ^{***} R ² =.047 F=16.611 ^{***} R ² 변화량=.009 ^{**}			

* p<0.05, ** p<0.01, *** p<0.001

a 모든 요인별 계수는 표준화계수

b 준거집단은 단순노무직

c 준거집단은 임시/일용직

3)보편주의 복지원리에 대한 태도

직종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다. 가장 상위의 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 전문직은 통계적 유의도도 낮았으며, 계수도 정의 방향을 나타냈는데 관리전문직은 소득이 높을 뿐 아니라 학력도 상층인 집단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교육이 통계적으로 유의성

을 가지는 것으로 입증되지는 못했지만 최상위 학력집단에서는 복지이해에 반하는 억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짐작케 한다. 장애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계급·계층가설이 지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복지공급에 있어서 보편주의 원리에 대한 지지도와 관련하여 첫 번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1에서 연령은 설명력 2.0%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으며 이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보편주의 원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계급·계층 변인들을 투입한 결과 직종은 추가설명력이 0.4%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소득과 직종은 모두 추가설명력 0.8%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영향력의 방향은 소득이 높을수록 보편주의 복지 원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종에서도 관리전문직과 사무판매직, 비경제활동 인구가 단순노무직에 비해 보편주의 원리를 더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주어 계급·계층가설의 전형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계급·계층에 따른 복지이해와 상충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에 조응하는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보편주의적 복지원리에 대한 태도는 앞의 두 가지 복지정책 태도와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필요로 하는데, ‘기존복지의 강화’와 ‘복지영역의 확장’은 경제적 능력이 낮은 집단의 수혜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많은 집단의 복지이해와 대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보편주의 원리에 따른 복지공급은 중간계급도 수혜자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극히 최상위층집단을 배제한다면 상위의 계급·계층집단의 복지이해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주의 복지원리에 대한 태도는 계급·계층이 복지태도와 정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아울러 조절변인인 교육 또한 이와 같은 방향의 관계를 가지므로 교육의 조절효과는 억제적이라기보다는 계급·계층 변인과 함께 친복지태도를 강화하는 조절효과가설이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보편주의 원리에 대한 두 번째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 2단계로 투입된 교육의 추가 설명력은 2.3%로, 연령과의 공변량이 모두 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령 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2단계에서 교육을 투입하자 연령 변인의 통계적 유의도는 오히려 사라졌다는 것이다. 즉 1모형에서 나타난 연령의 부정적 영향력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다는 점에 비추어 교육변인과의 공변량 효과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 3단계로 계급·계층 변인들을 투입한 결과 세 변인 모두 추가 설명력은

0.2%에 불과하였고 이 중 소득을 제외한 직종과 고용상의 지위는 통계적으로 유의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변인의 통제가 계급·계층 변인들의 설명력을 현저히 낮춤으로써 보편주의 원리에 대해서는 교육변인의 효과가 압도적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6] 보편주의 원리에 대한 태도와 교육 및 소득·고용상의 지위·직종

보편주의 원리에 대한 태도와 계층계급변인과의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소득		직종		고용상 지위			
모형I		모형II		모형II		모형II			
연령	-.142 ^{***a}	연령	-.104 ^{***}	연령	-.118 ^{***}	연령	-.125 ^{***}		
		소득	.096 ^{***}	직종 ^b		고용상			
				관리전문	.103 ^{***}	지위 ^c			
				사무판매	.070 [*]	상용	.076 ^{**}		
				농림어업	.021	고용주	.011		
				기능조립	.032	자영	.010		
				비경제	.068 [*]	비경제	.041		
상수=7.510 ^{***}		상수=6.927		상수=7.006 ^{***}		상수=7.193 ^{***}			
R ² =.020%		R ² =.028%		R ² =.028		R ² =.024			
F=43.478 ^{***}		F=30.232 ^{***}		F=10.244 ^{***}		F=10.509 ^{***}			
		R ² 변화량=.008 ^{***}		R ² 변화량=.008 ^{**}		R ² 변화량=.004(n.s.)			
모형I		모형II		모형III		모형III			
		연령	-.018	연령	-.024	연령	-.017		
		교육	.196 ^{***}	교육	.180 ^{***}	교육	.189 ^{***}		
				직종 ^b		고용상			
				관리전문	.055 ^{***}	지위 ^c			
				사무판매	.035	상용	.046		
				농림어업	.028	고용주	-.005		
				기능조립	.020	자영	.016		
				비경제	.049	비경제	.033		
		상수=5.186 ^{***}		상수=5.149 ^{***}		상수=5.098 ^{***}			
		R ² =.043		R ² =.045		R ² =.045			
		F=47.644 ^{***}		F=14.255 ^{***}		F=16.434 ^{***}			
		R ² 변화량=.023 ^{***}		R ² 변화량=.002(n.s.)		R ² 변화량=.002(n.s.)			

* p<0.05, ** p<0.01, *** p<0.001

a 모든 요인별 계수는 표준화계수

b 준거집단은 단순노무직

c 준거집단은 임시/일용직

정리하면 보편주의 복지원리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교육의 영향력은 다른 어떤 복지 태도의 하위차원에서보다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고용상지위, 직종의 세 계급·

계층변인은 모두 중간층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용상의 지위와 직종은 교육변인을 통제하면 통계적 유의도를 상실하며 소득의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도는 있으나 독자적인 설명력이 미약하여, 이에 대해서는 계급·계층의 이해보다는 교육이 더 중요한 변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복지정책에 있어서 기존의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등 이미 제도적으로 안착된 프로그램들에 대한 한국인의 복지태도는 동일한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서구사회의 복지국가 발달의 역사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회보험 여부나 노동력의 유무에 따른 프로그램별 복지태도의 분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복지프로그램별 복지태도는 이렇게 이미 제도화된 프로그램들에 대한 태도와 교육이나 주거, 양육 등과 같이 새로운 복지영역에 대한 태도로 하위요인이 구분될 수 있다.

기존에 제도화된 복지에 대한 태도와 새로운 복지영역의 확장, 그리고 보편주의 원리라는 세 가지 복지태도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계급·계층 변인들과 교육 및 연령 변인의 영향은 각 복지태도별로 뚜렷이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먼저 기존 복지제도의 강화에 대해서는 계급·계층 가설은 뚜렷이 입증되지 않았다. 계급·계층 변인 중 소득만이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명력이 매우 미약하였으며, 직종은 계급·계층 가설에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고 그 또한 설명력이 매우 적었다. 연령이나 교육 또한 설명력을 보여주지 못하여, 제도적으로 이미 안정되어 있는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시된 변인들에 의한 집단별 차별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복지영역의 확장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계급·계층 가설이 지지되었다. 계급·계층을 나타내는 세 변인, 즉 소득, 고용상지위, 직종 모두가 연령의 통제된 상태에서 추가 투입되었을 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추가 설명력을 보여주었으며 소득이 높을

수륙, 그리고 단순노무직에 비해 상위직종인 사무판매직, 농림어업종사자, 기능조립직 이, 또 임시/일용직에 비해 고용주나 자영업이 복지영역의 확장을 위한 정부지출의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세 변인 모두 일관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들 변인들의 추가 설명력이 크지는 않았으나, 두 번의 위계분석 모두에서 연령과의 공변량이 모두 통제된 상태에서의 추가 설명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나름 계급·계층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지영역의 확장에 대한 태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것은 연령변인이었다. 연령의 설명력은 3.8%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복지영역의 확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교육은 복지영역의 확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어려워 조절효과 가설은 부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보편주의 원리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교육 변인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었다. 1모형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던 연령변인은 교육이 투입되면서 통계적 유의도를 잃었고 첫 번째 위계분석에서 중간계급의 이해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보편주의 원리에 대한 태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소득과 직종 변인 또한 교육변인을 먼저 투입한 두 번째 위계분석에서 설명력이 크게 떨어져 소득 외에는 통계적 유의도를 잃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있어서 계급·계층 가설은 복지태도의 모든 영역에서 지지되거나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영역의 새로운 확장이라는 쟁점에서만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계급·계층 변인의 영향력이 크다고는 볼 수 없지만 계급·계층의 세 변인이 모두 일관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향후 복지정치에 있어서 기존제도의 미진한 부분을 강화하면서 재분배의 실효성을 높이는 경우에는 계급적 분화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새로운 종류의 급여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계급정치적 동원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연령 또한 복지영역의 새로운 확장에 대한 태도에 대해 계급·계층 변인의 영향력 보다 훨씬 큰 부의 영향력을 보여줌으로써 고연령층과 경제적 상층의 저항이 새로운 영역으로 복지를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큰 정치적 난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복지태도에 대한 교육변인의 억제적 조절효과 가설은 세 가지 복지태도 중 기존복지제도의 강화에 대한 태도와 복지영역의 확장에 대한 태도, 두 가지 하위차원에서 검증되

었는데 두 차원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두 가지 복지태도 모두에서 교육은 조절효과는 물론이거니와 독자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로써 그간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 복지태도에 대한 계급·계층의 영향력이 미약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왔던 현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 상층집단의 계급·계층에 기반한 복지이해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계급·계층 변인의 영향력이 복지태도의 여러 하위차원별로 달리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급·계층을 나타내는 세 변인의 영향은 복지태도의 하위차원별로 달리 나타나지만 각 하위차원에 대한 세 변인들 간의 영향력은 차이를 나타내기 보다는 비교적 일관되는 결과를 보여주어 계급·계층을 나타내는 여러 변인들 중 어느 변인을 택했는가가 계급·계층가설을 검증하는 데 큰 차이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로 미루어 향후의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는 복지태도의 하위차원을 정확히 특정하는 이론적 작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복지태도의 하위차원은 보편주의 원리에 대한 태도에서였다. 보편주의 원리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계급·계층에 기반한 중간층의 복지이해와 교육이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계급·계층변인에 대한 억제적 효과 보다는 강화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보편주의 원리에 대한 지지가 중간층의 계급·계층적 이해에서 비롯되는지 교육에 의한 공동체적 의식에서 비롯되는지에 따라, 확대될 수 있는 보편적 복지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와 계급·계층적 이해의 영향을 비교해보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교육이 계급·계층 변인들의 설명력을 압도할 뿐 아니라 교육변인의 통제로 계급·계층의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본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복지정치에서 중간층의 계급적인 복지이해를 뛰어넘는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호소가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또한 한국사회의 고학력화현상이 중간층을 포괄하는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확대와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다시 말해 한국의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구현과정이 스웨덴의 그것과는 매우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잘 알려졌다시피 현재 지구상 가장 확고한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스웨덴의 경우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한 계급동원에 힘입은 바 크다. 에스핑-안데르센은 복지국가에 대한 중간층의 지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중간층도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정책

과 함께 중간층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복지급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공적 복지체계 속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급여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추가로 민간복지급여를 구입해야 하고 이 경우 복지태도가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론적 논의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수혜자로서의 역할과 복지비용부담자로서의 역할이 동시에 기대되는 중간층의 복지이해는 매우 복잡하며, 스웨덴의 경우 이러한 중간층의 복지이해에 부응하면서 복지정치에 대한 지지층으로 이들을 포섭해나간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중간층의 복지이해에 대한 고려는 한국사회에서 복지제도를 확대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할 것이다. 최근의 무상보육이나 반값등록금 등에 대한 열망의 정치적 표현은 이들의 복지이해에 대한 호소가 한국에서도 역시 유효함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보편주의적 복지는 그 자체 중간층의 이해에 부합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에 대한 낙인효과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2010년과 2011년에 걸친 교육감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적 복지쟁점은 초중등학교의 무상급식이었다. 학생들의 급식비는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될 만한 정도의 소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간층에게 체감될 만큼 확실한 경제적 이익을 줄 만한 금액도 아니다. 사실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하는 측의 논리의 중심에는 어린 학생들이 ‘눈치안보고’ 급식을 제공받게 해주자는 것에 있었다. 이는 중간층의 단순한 계급적 이해를 뛰어넘는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지향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계급이익을 넘어서는 공동체적 가치 지향성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고려해볼 때 한국사회에서 향후 복지확대를 위한 정치적 호소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10년의 조사자료를 활용한 것이나, 한국 정치에서 복지적 쟁점이 부각된 것은 2010년 후반 부터였다. 대중들의 복지태도는 정치적 동원에 따라 새로 학습되면서 변화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난 1-2년을 경과하면서 한국인의 복지태도가 새로운 변화 국면을 맞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시의성은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2013년에 실시되는 복지패널의 복지인식조사는 후속연구들에 이러한 변화의 양상과 그 변화를 설명해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검증은 가능케 해줄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신영(2010).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 연구: 국가의 공적 책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1(1), 87-105.
- 김연명 · 이승욱 (역)(1997).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I. Gough의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elfare state(1979). 한울.
- 김영순 · 여유진(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경제와 사회*, 91, 211-240.
- 김영화, 이옥희(역)(1999). 복지와 이데올로기. V. George와 P. Wilding의 Ideology and social welfare(1989). 한울.
- 김은지 · 안상훈(2010). 한국 복지정치의 젠더메커니즘: 태도의 성별차이와 복지지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 309-334.
- 김희자(2003). 여성 · 가족 · 복지정책. 도서출판 양지.
- _____ (2012). 복지태도와 복지정치. *한국의 복지정치*. 학지사.
- _____ (2013).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동서언론*, 16, 59-88.
- 김희진 · 전희정(2010). 일반 국민들의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미치는 영향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보장연구*, 26(2), 95-121.
- 류만희 · 최영(2009).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연구: 복지의식, 계층, 자기이해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191-210.
- 류진석(2004).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56(4), 79-101.
- 안상훈(2009). 한국의 친복지태도 결정요인과 그 경로구조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16(1), 163-192.
- 양병화(2007).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학지사.
- 이병렬(1999). 피부양아동이 있는 편모가족에 대한 빈곤정책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2).
- 이성균(2002). 한국사회 복지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국가의 복지책임지지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2), 205-228.
- 이아름(2010). 한국인의 복지의식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34-264.
- 이훈희 · 김윤태 · 이원지(2011). 한국의 복지태도와 건강보험 인식의 결정요인. *사회보장연구*, 27(2), 1-25.
- 주은선 · 백정미(2007).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 *사회복지연구*, 34, 203-225.
- 함세남 외(1996). 선진국 사회복지발달사. 흥익재.

- Dunleavy, P. (1980).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sectional cleavages and the growth of state employment. *Political Studies*, 28.
- Gordon, M. S. (1988). *Social security policies in industrial count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 & Korpi, W. (1984). Social policy as class politics in post-war capitalism: Scandinavia, Austria, and Germany. J. H. Goldthrope (ed). *Order and conflict in contemporary capit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ilbert, N. (1984). *Capitalism and the welfare stat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Gould, A.(1982). The salaries middle class and welfare state in Sweden and Japan. *Policy and Politics*, 9(4).
- Kangas, O. & Palme, J. (1990). The public-private mix in pension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20(3).
- Le Grand, J. (1987). The middle class use of the British social services. R, E, Goodin, & J, Le Grand.(eds). *Not only the poor-the middle classes and welfare state*, London: Allen and Unwin.
- Le Grand, J. & D. Winter.(1987). The middle classes and the defence of British welfare state. R, E, Goodin, & J, Le Grand.(eds). *Not only the poor-the middle classes and welfare state*, London: Allen and Unwin.
- Mishra, R.(1990). *The welfare state in capitalist society: policies of retrenchment and maintenance in Europe, North America and Australia*,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Papadakis, E. (1992). Class interests, class politics and welfare state regim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4(2).
- Saunders, S. (1990). *A nation of home owners*. London: Unwin Hyman.
- Svallfors, S. (1995). The end of class politics? structural cleavages and attitudes to Swedish welfare policies. *Acta Sociologica*, 38.
- Taylor-Gooby, P. (1982). Two cheers for the welfare state. *Journal of Public Policy*. 2(4).
- _____ (1983). The welfare state and individual freedom: attitudes to welfare spending and to the power of state. *Political Studies*, 31(4).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class and the welfare attitudes and regulating effects of education

Kim Hee-Ja*

Class has been the factor that affects welfare attitudes in western societies. But the results of the studies on affects of class in Korea are not consistent.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s between three class variables-income, status in employment, occupation-and the Korean attitudes on welfare policy and examines the regulating effects of education on that. Attitudes on welfare policy consist of 'reinforcement of established welfare programs', 'expansion into new welfare area' and 'universalism in welfare policy.'

The result shows that all three class variables, education and age do not affect the attitudes to 'reinforcement of established welfare programs.' Age and class variables affects the attitudes to 'expansion into new welfare area' statistically, but education does not. Education explains largest parts of the attitudes to 'universalism in welfare policy.'

Key Words: welfare attitudes, middle class welfare interests, class interests

◆ 2013.03.04. 접수 / 2013.03.29. 1차 수정 / 2013.04.12. 게재 확정

* Ph.D.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Daejin University(somink@daejin.ac.kr)